

70회기 NCCK 화해·통일위원회

# 정책협의회

“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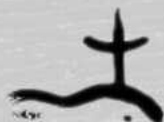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전망과 교회의 역할”

”

▪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비대면(ZOOM)으로 진행

ID: 854 341 7179 / 비밀번호: 3417179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70th 화해·통일위원회 정책협의회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한반도 평화통일을 향한 전망과 교회의 역할

## 1. 사회 및 인사

사회 최수산나 국장 (NCCK 화해통일위원회 서기)

인사 정병주 목사 (NCCK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 2. 발제 3

서보혁 박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2022년 한반도 평화구축 전망과 과제 4

나해집 목사 (한국교회 종전평화캠페인 본부장)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과 한국교회 11

## 3. 토론 및 전체토론 16

정육식 대표 (평화네트워크) 2022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과제 17

송병구 목사 (평화통일을 향한 교회의 역할)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역할 20

## 4. 마무리 발언 이흥정 총무 (NCCK 총무)







6

# 발제

서보혁 | 2022년 한반도 평화구축 전망과 과제

나핵집 |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과 한국교회

# 2022년 한반도 평화구축 전망과 과제

서보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1. 2021~22년 북한 동향 평가

2021년 12월 말, 미국 비정부기구 핵위협대응구상(Nuclear Threat Initiative)은 김정은 정권 들어 미사일 시험발사(실패 포함)가 129회였다고 집계하였는데, 이것은 김일성 정권 15회, 김정일 정권 16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횟수이다. 김정은 정권은 일련의 ‘은하’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필두로 중거리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단거리미사일 개량,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등 20종에 가까운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2022년 벽두에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발사(1.5., 1.11.)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1.14., 1.17.)는 그 현주소이다. 이제 북한은 발사방식, 비행 거리 및 방식, 파괴력 등에서 다종다양한 미사일 능력을 확보해 보다 유연한 군사전략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1월 11일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에는 김정은 총비서가 참관했고, 철도기동 미사일 시험발사는 “전국적인 철도기동 미사일운용체계” (노동신문 1.15.) 수립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금년 들어 네 차례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언론은 주로 북한의 국내정치 혹은 대외교섭용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에 앞서 김정은 정권 들어 그 능력이 크게 높아진 미사일의 군사전략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이어 북한은 1월 17, 25, 30일 단/중장거리 탄도/순항미사일 발사시험을 계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는 뚜렷한 대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 보고에서 집권 10년간 “국가 핵무력 건설 대업을 빛나게 완성하고 국가 방위력 강화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 왔다고

자평한 후,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악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극심해” 지고 있다며 “국가방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데 대한 혁명적 립장을” 표명하였다(중앙통신 2021.1.9.).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비롯해 초대형 핵탄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무인정찰기 보유 등을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주요 과업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군사력의 정예화·첨단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이런 군사안보정책은 국내정치나 협상용이라기보다는 그 자체의 안보정책을 밝아가고 있다. 특히 1월에 과시한 고난도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그 종착점을 예상하게 해준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미사일 탄두에 핵을 장착해 실전배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습·연속 발사 및 2차 보복공격 능력 확보 등 최고 과제의 달성을 위해 대내외 정세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정권은 미국과 끝을 알 수 없는 적대관계와 불확실한 동북아 지정학적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믿음직한 안전판으로서 핵미사일 보유를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2021년 12월 27~31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새해 들어 김정은이 참석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북한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고 한다(중앙방송 2022.1.20.). 북한 관영 노동신문(1.4.)은 국가방위력 강화 사업을 비상방역사업, 반/비사회주의와의 투쟁과 묶어 “인민사수전, 제도보위전”의 과제라고 평가하였다. 이런 판단 아래 북한의 군사력 증강을 저지하고 평화구축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기존의 대북 접근이나 협상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북한 관영언론은 위 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보도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기존에 수립해놓은 원칙과 기본방향에 따라 상대의 반응을 보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원칙이란 ① 자주권 존중, ② ‘선대선 강대강’, 기본방향은 ① 전쟁억제력 강화를 통한 평화조성, ② 자주권 존중 여부에 따른 대화와 대결 선택이다. 핵문제와 관련해 김정은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우리 공화국이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람용하지 않을 것”이라 했다. 핵보유를 전제한 입장 표명으로서 기존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과 거리가 멀다. 북한은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제재 조치를 발표하자, 곧바로 두 차례의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로 응수하였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강대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상황의 지속과 국제관계의 불확실성, 남한의 선거정국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하는데 의도하지 않은 기회가 되고 있고 북한은 이를 십분 활용하는 형국이다. 1월에 열린 당중앙위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는 핵실험이나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사하는 언급까지 나왔다.

앞으로 5년여 동안 북한은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밝힌 5대 핵심 무기 보유까지 나아갈 것이고 이는 안보정책이 외교정책 앞에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대북 제재 레짐의 지속,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 낮은 남북/북미대화의 가능성, 북·중·러 협력 양상 등이 예상된다. 이는 대북 압박 중심의 북핵정책의 모순, 즉 그 불가피성과 한계를 동시에 말해준다. 그런 가운데서 김정은 정권은 경제개발에 주력해 장기집권을 도모할 것이다. 물론 2018년 같이, 북한이 적절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판단할 경우 군사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협상 구도는 지금보다 더 엄중할 것이다.

## 2. 남북관계 평가: 평화 프로세스의 가능성과 한계

2021년 남북관계는 간헐적인 대화를 제외하면 이전 해와 같이 협력 부재로 채워졌다. 대화 및 협력 부재는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핵화와 안전보장을 둘러싼 공동 이행방안에 대한 북미 양측의 합의 실패 말이다. 김정은 정권은 하노이 회담 실패와 남북 합의 이행 지연 등에 관해 한미 양국을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김정은은 그해 4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 이라고 했다. 김정은은 자신이 하노이 회담에서 거론한 “적대세력들의 제재해제 문제 따위에는 이제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우리의 힘으로 부흥의 앞길을 열 것” 이라고 공언하였다.<sup>1)</sup> 문재인 정부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과 그에 따른 북한의 태도를 보고 평화 프로세스를 이어가야 한다고 재삼 다짐하고, 6월 30일 최초의 남북미 세 정상 간 판문점 회담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평화 프로세스가 더 이상의 진전으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김정은 정권의 실망이 깊어지면서 “자력갱생”, “자력부강” 노선에 대한 집착은 높아갔다.

2020년 6월 9일 북한은 남한 민간단체가 접경지역 일대에서 살포한 대북 전단을 문제삼아 남북 통신연락선 단절을 통보하였다. 급기야 1주일 후(6.16) 북한측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였다. 한국, 미국과 대화의 창을 잠근 채 김정은 정권은 ‘자력갱생’ 노선을 본격화해갔다.

2021년 남북은 다시 물밑에서 대화 재개를 위한 소통을 벌여나갔다. 문재인 정부로서는 “평화로운 한반도”<sup>2)</sup>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수적이고,

1) 『조선중앙통신』, 2019.4.13.

2) 이 표현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한반도정책의 목표를 담은 공식 표현이다.



2018년 판문점 및 평양 공동선언의 이행이 우선 과제였다. 문 대통령은 제102주년 3·1절 기념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도 변함없이 노력할 것” 이라고 전제하고,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 등 3대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제안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상반기 다각도로 전개한 대화 복원 노력의 결과, 7월 27일 남북이 동시에 통신연락선 복원을 발표하였다.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은 남북정상 간 합의사항으로 알려졌고, 북한의 호응에는 북한이 문제 삼았던 대북전단의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월 30일부터 시행된 점과 코로나19의 지속 및 식량 부족 등 북한 대내적 요인도 작용했을 것이다.<sup>3)</sup> 그러나 한국에서는 청와대에서 직접 통신선 복원을 발표한 것에 비해 북한은 통신사 보도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북한이 이 조치를 남한만큼 중요하게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했다. 노동당 부부장 김여정은 8월 10일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통신연락선을 다시 단절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다음날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도 담화를 내 “북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손으로 날려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하여 똑바로 알게 해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sup>4)</sup> 그후 10월 4일 남북 통신연락선은 재복원되었지만 연락선의 의미에 대한 남북의 상이한 태도와 재단절 및 복원과 같은 시행착오 등을 고려할 때 남북 통신연락선 가동을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징표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과 그에 대한 북한의 반응 역시 위와 같은 간접적인 소통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종전선언에 관한 북한의 입장은 전면 긍정도 부정도 아니었다. 2018년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 전후로 북한은 종전선언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향후 미국과의 평화협상을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이었고 북한도 ‘선언’ 보다는 제재 완화를 통한 실리를 추구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이후 종전선언은 묻히는 것처럼 보였다가 한국정부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을 위한 촉매로 살려낸 것이다. 2021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하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9월 24일 “남조선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관계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해볼 용의가 있다” 고 관영언론 담화를 통해 밝혔다. 김 부부장은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 며 “장기간 지속돼오고 있는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상태를 물리적으로 끝장내고 상대방에 대한 적대시를 철회한다는 의미에서의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선결 조건<sup>5)</sup>이 마련돼야 서로 마주 앉아 의의 있는 종전도 선언할 수 있을 것이며 북남관계, 조선반도의 전도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 이라

3) 조한범, “남북통신연락선 복원과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반발 평가와 전망,” 『Online Series』, CO 21-24 (통일연구원, 2021.8.18.).

4) 이무철 외 엮음, 『한반도 동향』, 8월호, 통일연구원(2021.8).

5) 선결조건에 관해 김여정 부부장은 위 담화에서 “종전이 선언되자면 쌍방간 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정책, 불공평한 이중기준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중앙통신』, 2021.9.24.

고 조건을 걸었다.<sup>6)</sup>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전략으로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전략을 달성할 실행 과제로 한반도 신경경제지대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3년이 훨씬 지난 2021년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제일의 추진과제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비핵화·평화체제 진전’ 을 제시하면서 발전된 남북 연락·협리기구 구축과 남북회담 개최 남북합의 이행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2018년 1년간 개시된 평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가운데 제시된 것이지만 2017년 출범때의 목표에서 진전된 내용은 아니었다. 이어 제시된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 구축 추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DMZ 국제평화지대화 추진과 남북 접경지역 평화 증진 등과 같은 과제도 제재국면과 남북대화 중단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성이 떨어진 희망사항에 불과해 보였다.

2022년 들어 통일부가 밝힌 업무보고는 “중단 없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평화를 지키고 만들어간다.” 는 목표 하에 일관된 대북 통일정책의 추진, 한반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고, 그 실행 방안으로 남북정상회담 등 방역안전 회담 체계 구축, 남북관계 차원의 비핵화 협상 진전 촉진, 코로나 19 방역협력 등 보건의료협력, 탄소중립 및 기후환경 협력 등 단계적 확대, 설 계기 등 대면 화상상봉 재개 등을 제시하였다.<sup>7)</sup> 그러나 북한의 반응은 호응과 협력이 아니라 무시와 도발이었다.

### 3. 평화구축의 전망과 과제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선 국내에서는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과 통일부의 명칭 수정 등 대북정책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들이 여과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2021~22 겨울 시즌 북한의 군사동향과 5년 간 문재인 정부가 전개한 평화 프로세스의 희망과 한계를 종합 고려할 때 향후 남북관계의 중심이 이동할 것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통일과 평화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기보다는 질을 달리하는 평화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즉 핵평화와 비핵평화 사이에서 남북은 선택이냐 조화냐 하는 고난도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 문제는 한반도 미래는 물론 세계평화에도 중대한 의미로 다가갈 것이다. 평화운동은 이런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잠정 평화에서 영구 평화로 가는 길을 안내하고 그 과정을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 과제일 것이다.

6) 『조선중앙통신』, 2021.9.24.

7) 통일부, “2022 업무보고,” 통일부 홈페이지 (검색일: 2022.1.20.).



이상과 같은 북한의 입장과 역내 안보정세를 종합 고려할 때 대북정책은 새로운 방향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북핵 중심의 위로부터의 접근을 수정 보완하는 것인데 그 방향을 ‘두꺼운 평화’로 제안해본다. 두꺼운 평화는 ‘튼튼한 평화’와 ‘두터운 평화’를 합한 것인데, 먼저 튼튼한 평화는 전통적인 안보정책을 통한 평화이다. 다만 그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증강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맞서는 억제전략 수립은 불가피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대중·러 외교의 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튼튼한 안보정책에 비핵화가 당연히 포함되지만 최종 목표와 중간 목표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같은 군비통제와 남북 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 등을 병행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남북·북미 양면 대화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두터운 평화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에 모든 대북정책 이슈를 연계하지 않고 병행 전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방향은 한국이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고, 그 방식에는 보다 유연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은 물론 2021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련 자발적국가보고서(VNR) 제출, 그에 앞서 인권개선 관련 보편정례검토보고서(UPR) 3회 제출(2009, 2014, 2019) 등 다방면에 걸쳐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상황과 제재를 고려해 그 시행이 더디지만 북한정권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의지는 뚜렷하다. 남북협력에 대비하되 그에 앞서 북한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제기구에 인력과 재정, 기술지원을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제재 면제가 가능한 보건·의료·관광·인도지원 등은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지속되어 온 분야이고, 코로나 상황의 완화 시 직접 협력의 재개가 유력시된다. 이런 접근은 남북 간 신뢰 형성을 가져다줘 남북협력의 폭을 넓혀주고 결국 한반도 평화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지름길이 막혀 있을 때 우회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 과정에서 더 나은 길을 생각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대북정책은 안보평화정책과 인도개발정책을 양측으로 하는 하나의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전개해나갈 필요가 커졌다. 그 둘 사이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보다는 조율된 전개를 추구해 볼 만하다. 비핵화 정책은 그 비중을 유지해야겠으나 북핵문제에만 집중하는 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북중 간에 재개된 교역이 시사하는 바를 엄중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의 삶과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최상의 목표 하에 관련 정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는 통합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을 준비할 때이다. 요컨대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평화프로세스를 보다 큰 호흡에서 내다보고, 보다 현실주의적으로 접근할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한반도 평화구축은 이상적인 최종 목표를 공유하되 현실가능한 단기 목표를 설정해 전개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와 그 일대에서 전쟁위험을 완전히 청산하고, 역내 모든 국가들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공존공영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과제들로 한반도 비핵지대화 달성,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남북관계의 제도적 발전, 북미/북일관계 정상화, 그리고 북한의 국제협력 정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목표를 향해 단기적으로 추구할 목표는 그 수준을 조정해 달성가능하고 그것이 다음 목표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 그럴 때 평화 ‘프로세스’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향후 5년 가량 단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과제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해본다.

① 비핵화;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 및 IAEA 핵사찰, 그 상응조치로 민생관련 대북 제재 해제. 대북 민간교류 및 일부 투자 허용 등

② 평화체제; 남북/북미 (기존) 합의에 의거해 긴장완화 및 평화구축 방안 추진 (DMZ 평화지대화 등 남북군사합의서 이행, 북미 간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남북 교류협력 관련 유엔사의 협력, 남북미 간 일부 운용적 군비통제 등)

③ 남북관계; 공동연락사무소 복원 및 경제·사회문화 관련 남북협력 제도화, 금강산 관광사업과 이산가족 문제 일괄 추진,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방안 합의 등

④ 북미/북일관계; 인도협력(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및 실종자 문제 해결), 연락사무소 개소, 관계정상화 목표 실무회담 전개 등

⑤ 역내 다자협력; 보건, 기후, 식량 등 합의에 근거한 협력 (민간 혹은 1.5트랙 우선 전개), 미세먼지 대응/지진 모니터링/감염병 백신 개발 등 남북중일 4자 전문가회의 운영 등

# 한반도 종전평화캠페인과 한국교회

## 나해집

(한국교회 종전평화캠페인 본부장)

코로나 팬데믹이 3년 째 진행 중인 가운데 올 해는 3월 9일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을 앞두고 있다.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의 직무는 영토와 헌법을 수호할 뿐만 아니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닌다(헌법 제66조2-3항). 헌법을 수한다는 것은 평화적 관점에서 국토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헌법전문).

지금까지 안보개념은 군사안보(military security)에 집중해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의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군사적인 안보와 역외 패권에 의존하는 동맹체제(alliance system)를 추구해 왔다.

어느 나라든 군사적인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안보개념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얻게 되었다. 지구촌 전체가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새로운 경험을 했다.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 무기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들은 세계 최강, 핵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조차 무력화시켰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강력한 무기를 갖춘다고 되는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을 경험하고 분단체제를 이어오는 동안에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살아왔고 안전에 대한 강한 욕구가 안보심리를 불러왔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재(defense mechanism)가 보이지 않게 형성되었다. 안보프레임 속에서 심리적인 방어기재로서 적개심과 두려움이 존재하고 무기와 동맹 체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분단의 세월을 살아오는 동안에 안보프레임에 갇혀 두려움과 폭력성이 일상이 되었다. 분단 상황의 안보프레임 속에서

적개심과 폭력성은 정당화 되었다.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조차 분단프레임 속에서 간혀 있는 모습을 본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군사적인 문제를 넘어 평화와 생명의 가치가 중요하게 떠오르며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 앞에서 있다. 무한성장과 무한 소비를 추구해 온 인류 앞에 진정한 살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음을 던지고 있다. 이 물음에 대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있다.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기준(new normal)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이란 기존절서를 넘어서는 일이고, 시대의 징조를 읽고 경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한반도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분단체제를 넘어 평화를 추구하고 생명의 가치(생물다양성)를 소중하게 여기는 도상 위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전쟁의 위협을 없애고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가는 과정에서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있다.

## 1. 한국전쟁과 분단의 과정에서 한국교회

한국전쟁은 냉전의 산물이다. 세계 냉전의 끝 지점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내전은 국제전으로 확산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이후에 한반도는 이념적인 대립이 심각했다. 이념적인 대립 속에서 수많은 양민들이 학살되었고 수시로 발생하는 내전은 결국 한국전쟁으로 비화되었다. 한반도의 북쪽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항일투쟁세력들이 토지개혁 등을 단행하면서 교회와 큰 마찰을 빚었다. 특히 원산 부흥운동(1903년/ 하디선교사)과 평양 대 부흥 운동(1907년)으로 평양이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로 교회는 부흥했다. 토지개혁을 통해 갈등을 빚던 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남하함으로써 북한 정권이 수립되고 남한 역시 이승만을 중심으로 정부가 수립되었다. 남하한 북한교회 지도자들과 이승만 정권이 손을 잡고 승공통일을 주장했다. 북한에서 토지를 빼앗기고 속수무책으로 남하한 그리스도인들은 공산정권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빼앗긴 자신들의 토지를 찾고 회복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의 승공통일을 지지하는 세력이 되었다. 정전협정을 맺을 때도 정전에 반대하고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공산주의자들을 박멸하고 자신들의 것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평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념적인 방향으로 흘러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보수교단을 중심으로 이런 흐름이 강한 것은 선 경험 때문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선 경험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경험 속에 간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전쟁과 분



단체제 안에 메몰 되어 지금도 공산세력을 척결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교회 안의 이런 흐름들이 종전이나 평화를 이루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서의 가치보다는 이념의 가치를 우선함으로서 현재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세계교회협의회(WCC)의 평화를 위한 노력

분단 이후 한국교회에 형성된 보수 성향에도 불구하고 NCCK를 중심으로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것은 세계교회의 선교방향과 무관하지 않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파트너(하나님의 선교)라는 선교 개념에 따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 이전에는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민주화의 인권의 문제에 집중했다. 여기에 해외 교회들의 연대와 후원이 큰 힘이 되었다. 광주민주화운동 이후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났고 분단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정한 민주화를 이룰 수 없다는 깨달음과 함께 통일 문제, 분단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된다.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통일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낙인찍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984년 WCC는 국제문제위원회(WCC-CCIA) 주최로 일본의 도잔소에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정의협의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교회의 입장에 대해 협의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위해 세계교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하기 이른다. 이른바 도잔소 프로세스가 시작되었다. 이후 WCC의 주선으로 남과 북의 교회의 만남이 이어진다 (글리온에서 3번, 일본 간사이 하우스에서 1번). 세계교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1988년에 NCCK는 제37회 총회(1988.2.29./연동교회)에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 선언(88선언)’을 발표하게 된다. 88선언은 통일운동의 장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분단과 증오에 대한 죄책을 고백했고 72년 7.4공동성명에 나타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인도주의 원칙과 민중참여의 우선적인 보장원칙을 추가함으로써 분명한 원칙을 선언했다. 특히 전쟁상태의 종식과 평화협정의 체결, 평화와 안정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었을 때 주한미군의 철수와 유엔사령부의 해체도 요구했다.

NCCK는 88선언 이후에 전쟁종식과 평화협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북한교회와 공동기도회는 금강산과 평양에서 여러 차례 진행했다. 특히 WCC 10차 총회가 부산으로 결정되면서 평화협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소위원회를 만들고 평화협정체결 서명운동이나 평화열차행사를 통해 국, 내외에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알렸다.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조약(안)도 만들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WCC 10차 총회(2013.10.30.-11.8)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 선언서에 미래로 가는 권고안 중에 “정전협정을

평화조약으로 바꾸어 전쟁상태를 종식 시킬 폭넓은 캠페인을 시작 한다” 고 되어 있다. 이후 NCK는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행정청원을 청와대에 제기 (2015. 7.27)하는 것을 시작으로 평화조약 캠페인에 나서게 된다. 미주캠페인 (2016년/미국), 유럽캠페인 (2017년/영국, 스코틀랜드, 독일, 스위스), 아시아캠페인 (2017년/일본, 한국), 정교회 캠페인 (2019년/러시아, 그리스, 터키) 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세계교회는 이 캠페인에 함께 참여했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다. 평화조약캠페인의 경험을 집약해 민의 평화협정을 70여개 종교, 시민단체와 함께 선언(2020.7.27.) 하고 화해통일위원회 등의 제안으로 300여개 종교, 시민단체와 함께 종전선언 캠페인과 서명을 시작했다 이 운동은 2023년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시점까지 세계의 1억 명 서명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 교단들에게 서명운동에 함께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고 지역조직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교회와도 zoom회의를 통해 서명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한반도 분단체제와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 3.지금은 아픔에 집중 할 때

노동자 시인 정세훈은 ‘몸의 중심’ 이란 시에서 이렇게 말한다.

*몸의 중심으로/ 마음이 간다/ 아프지 말라고/ 어루만진다/ 몸의 중심은/ 생각하는 뇌가 아니다/ 숨 쉬는 폐가 아니다/ 피 끊는 심장이 아니다/ 아픈 곳/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처 난 곳/ 그곳으로 온 몸이 움직인다/*

시인의 시는 분단 상황에서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에게 상상력을 불어넣고 있다.

아픈 지점, 그 중심을 찾아내 마음이 가고 몸이 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가장 아픈 지점이 어디일까? 그것은 수십 년 이어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아픔으로 몰아넣은 분단체제가 아닐까? 이 문제를 풀어내지 않고 한반도라는 몸이 건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구촌의 중심이 힘을 가진 워싱턴이나 베이징이 아니고 아파하고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의 현장이듯이 한반도 역시 이 아픈지점에 마음이 가고 몸이 가지 않으면 건강한 몸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내는 노력이 평화 운동이고 종전선언 캠페인이 될 수 있다. 변방의 갈릴리를 중심으로 세우신 예수님처럼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픈 지점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운동의 시작이고 그 아픔을 치유해가는 과정으로서 평화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몸이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몸이 심각한 상태이다. 아픔의 예민한 감각을 일깨우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는 아직 분단의 아픔

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분단의 현장인 DMZ를 걸으면 그 아픔이 고스란히 다가온다. 과거 적과 아군으로 싸우던 군인들이 죽어 한 줌 흙이 되어 하나가 되어 있다. 땅속에는 적도 없고 아군도 없다. 적막과 고요가 감싸는 DMZ 현장을 걸으면서 귀를 기울이면 희생자들의 소리가 들려온다. 전쟁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들려준다.

스텐퍼드 심리학교수인 자밀 자키(Jamil Zaki)는 공감은 다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다.

인지적인 공감은 머리로 알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서적인 공감은 가슴으로 느끼는 상태를 말한다. 공감적인 배려는 몸으로 발로 행동하는 상태를 말한다. 분단의 아픔과 평화를 이루기 위한 절실함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과 몸으로 이어지는 노력이 지금 요구되고 있다.



01

# 토론

정옥식 | 2022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과제

송병구 | 평화통일을 향한 교회의 역할



# 2022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전망/과제

**정옥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

## 올해 북한의 대외 정책과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들

첫째,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이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관심 끌기나 한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유행하지만, 이는 부차적이다. 북한의 의도는 북한 지도부가 작년부터 부쩍 강조해온 두 가지 표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군사력 균형”과 “전쟁 억제력”이 바로 그것이다. 즉, 군사적 적대관계에 있는 한·미·일을 상대로 최대한 군사력 균형을 맞춰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근본적인 의도이자 목표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미일은 올해에도 군비증강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맞서 북한도 “국방력 강화” 노선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국의 대선 결과이다. 일단 북한은 남한의 대선 결과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관계없이 “핵무력 완성”을 향해 폭주를 한 바 있다. 또 ‘진보 정권’으로 불려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 및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남한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대북정책의 본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당선시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의 교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019년 이래 남북관계가 악화된 중요한 요인이 남한의 역대급 군비증강 및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가 남북관계 개선 및 북미대화 중재에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만큼, 교착 상태가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8월 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그 풍향계로 삼으려고 할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형 3축 체계에 기반을 둔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면서 야외 기동훈련이 포함된 한미연합훈련 강화,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 요구, 사드 정식 배치, 대북 제재에 대한 강경한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셋째,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우선순위, 다른 정책 및 전략적 목표와의 관계, 의회 및 여론, 정책 성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 한국과 일본 등 동맹·우방국들과의 관계, 북한의 정책과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려 수립된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있다’면서도 한미연합훈련 유예나 대북 제재 완화 등 선제적인 양보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북 억제력 강화를 대북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온 기존의 관성이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넷째, 미중 전략 경쟁이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및 중국의 당대회를 고려할 때, 올해에도 미중 전략 경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이를 예의주시해왔는데, 특히 대만 해협 등에서 미중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한이 “전쟁 억제력” 강화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충돌에 연루될 위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와중에 미국은 ‘북한위협론’을 꽃놀이패 삼아 대중 압박 강화에 활용할 것이고, 중국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 증강을 ‘세력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미국의 주요 전략 문서이다. 곧 발표될 국가안보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핵태세검토(NPR), 미사일방어체제(MD) 보고서 등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북한의 “군사력 균형” 및 “전쟁 억제력” 확보 목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위의 변수와 요인들을 종합하자면, 올해 한반도 정세는 어둡다. 미세먼지에 비유하자면 ‘보통에서 매우 나쁨’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 2. 단기적 과제

한국 정부의 선택지는 대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 기간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올봄 한미연합훈련이 단기적으로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만약 연합훈련이 실시된다면, 북한은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응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거리 로켓 발사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인공위성(군사위성, 감시 정찰 능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쏘아올리기 위한 우주발사체이고 또 하나는 ICBM급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이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

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독자적인 제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올봄 연합훈련을 유예하기로 하고 이를 대선 이후에 발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오미크론 방역과 안정적인 정권 이양을 위한 한반도 정세 관리라는 명분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차기 정부와 북한 사이의 대화의 디딤돌을 놓아야 할 것이다. 인수위 기간에 당선자 측과 함께 판문점 등에서 남북대화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 차원에서선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현재 서명자 수는 11만 4천명 수준인데, 이는 내년 7월 27일까지 1억명 서명 목표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평화운동 진영은 담보 상태에 빠진 서명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종언평화운동의 당위성과 가능성

송병구

(NCCK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나핵집 목사의 발제문은 지당한 언급이다. 종전평화선언운동을 제안했지만, 이미 한국교회가 1980년대를 출발점으로 하여, 지금까지 중단없이 그 흐름을 이어온 맥락 가운데 존재한다. 다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란 노래를 더 이상 부르지 않듯이 상황이 약간 변했을 뿐이다. 한 팀의 입장에서 논찬할 입장이 아니나, 다만 같은 주장을 조금 더 뒷받침하고, 생각을 보완하려고 한다.

발제문의 출발점은 코로나19란 새로운 상황이었다. 팬데믹은 일상의 부자유, 사회적 마비, 공동체의 지체를 가져왔다. 공동의 적을 퇴치하려는 국민적 수고와 협력이 있었고, 크게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협력은커녕, 현 정부의 방역 실패와 이를 계기로 정권교체 분위기를 자극하려는 반대도 있었다. 야당과 보수언론은 “망해라 망해라”를 주문처럼 반복해 왔다. 그 배경에는 코로나19든, 전쟁상황이든 우리 사회의 적대적 프레임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베이스 세력의 존재를 짐작하게 한다. 조지 오웰은 <카탈로니아 찬가>에서 “전쟁의 가장 끔찍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전쟁 선전물, 모든 악다구니와 거짓말과 증오가 언제나 싸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점이다” 라고 말하였다.

해방 이전과 이후, 기득권 세력인 그들(친일, 친미, 반공, 반민주, 반개혁, 보수)에게 코로나19는 나만 피할 수 있다면 남의 일일 뿐이다. 분단상황을 지속하려고 남북 간 전쟁마저 불사하려는 그들은 선거 때마다 세력화하여 두려움, 갈등, 적대감,



가짜뉴스를 자양분 삼아 '평화 대 안보'로 세력 대결과 남남갈등을 부추긴다. 77년 기득권 세력의 본질이다. 당장 3.9 대통령 선거에서 양대 세력을 대표하는 후보자의 정책에서 사안마다 극명한 견해 차이를 비교하면 심각한 대립각이 드러난다. 상식적으로 궁극적 안보는 평화를 통해 가능하며, 평화가 분단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2022년 5월 9일에 끝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막바지까지 종전선언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으려고 애쓴다. 한계는 분명하지만, 쇼트 트랙 선수가 결승선을 다투며 마지막 스케이트날을 앞으로 내밀듯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다. 현 정부가 임기 마지막 날 멈춰선 바로 그 자리에서, 차기 민주정부가 발걸음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모순과 대립은 우리 자신이 늘 마주하는 현실의 모습이다. 남한 사회에서 체제와 이념의 간극과 갈등은 고스란히 교회 안에도 작용한다. 분단과 전쟁에서 발생한 분단프레임은 교회가 직접적 당사자이기에 오히려 사회보다 골이 깊고, 만연하다. 마치 마을마다 좌우가 대립하고, 대대로 갈등을 이어온 '마을로 내려온 전쟁'과 같다. 한국교회는 전쟁 이후 반공월남 세력이 주도하면서 분단체제의 교회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평화의 언어가 신앙고백적 삶으로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대체로 보수화, 고령화, 기득권화 된 교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분단극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복음의 가치보다는 이념의 가치를 우선한 나머지 최근에는 심지어 주술도 수용할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종전평화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종전, 곧 전쟁의 멈춤은 사전적 의미로 "움직임이나 동작이 그쳤다"는 것으로,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운동을 외면하고 반대하는 일이 어떤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지 헤아리기 어렵다. 3년 열전을 벌이다 정전협정을 한 목적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정치회담을 '3개월' 안에 열라고 규정하였으나, 69년 6개월이 지난 지금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3년 부산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총회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이끌어 냈다. 이미 남과 북은 2007년 10·4 선언에 이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작업까지 구체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70년을 끌어온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선언은 상식이자 당위이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체제를 만드는 일은 한국 사회의 분단프레임을 해체하는 계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국교회가 벌이는 종전평화운동은 가능할까? 단순한 서명운동에 머물지 않는다.

실은 서명 조차 결코 쉽지 않다. 우선 주도하는 입장에서 헌신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고, 캠페인 차원에서 별인다지만 우후죽순 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어렵다. 우리만의 단톡방을 벗어 나기 어렵다. 결국 구체적인 교회와 목회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구체적인 가슴과 만나야 한다. 지금껏 하지 못했던 낮은 자세로, 바닥을 기듯 평화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헌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화를 두려워 말아야 한다.

한국교회의 평화세력에게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자신이 대립과 대결의 한쪽 당사자로 존재해 온 일은 자연스럽다. 이제 더 내 딪어야 한다. 루츠 모티카프 목사의 말이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갈등과 파괴 앞에서 분별 있는 대화상대자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필요합니다” (구 동독교회, BEK). 생명, 정의, 평화를 위한 한국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의 평화의 언어로 우리 자신을 설득할 수 있을까?

# 기독교청년 SEASON 8 통일아카데미



- ▶ 아카데미 : 2022년 3월 8-29일 (매주 화요일)
- ▶ 기독교청년 통일대화마당 : 4월 5일 (화요일)

## 01 아카데미

- 01 신청대상 각 교단과 단체의 20-39세 기독교청년
- 02 인원 25명 (선착순)
- 03 일시 2022년 3월 8-29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04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에이레네홀 | 온라인 ZOOM
- 05 회비 전체 40,000원 (강의당 10,000원)

## 02 기독교청년 통일대화마당

- 01 신청대상 누구나 (회비 없음)
- 02 일시 2022년 4월 5일 (화요일) 저녁 7시
- 03 장소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 | 온라인 ZOOM

## 03 신청안내

- 01 신청링크 <https://url.kr/rdfzw4>
- 02 문의 하성웅총무 010-2803-0191
- 03 QR 코드 

일시	주제
1주 3/8 화	요즘의 북한 : 청년세대의 문화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원
2주 3/15 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 오주연 힐데와소피 대표
3주 3/22 화	2022년 동북아/한반도 정세와 중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4주 3/29 화	평화통일과 기독교청년 이대훈 성공회대학교 교수
5주 4/5 화	기독교청년 통일대화마당

# 70회기 화해통일위원회

## 주요일정

### 상반기

1월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KPA) 국제 컨설팅이션 ·한국교회남북교류협력단
2월	·한독교회협의회·한미워킹그룹 ·KPA 국제 컨설팅이션 ·70회기 정책협의회
3월	·20대통령선거 ·1차 마주이야기-대선평가 ·8차 기독청년통일아카데미 ·KPA국제컨설팅이션
4월	·부활절남북공동기도문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전국지부 연석회의
5월	·한미워킹그룹 ·WCC총회 한반도평화통일성명서 초안위원회
6월	·KPA 캠페인 집중기간

### 하반기

7월	·KPA 캠페인 집중기간 ·CBS평화심포지엄
8월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8.15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예배 ·WCC총회 워크샵, KPA서명운동
9월	WCC총회, EFK(한반도에큐메니칼포럼)회의
10월	한국·미국·캐나다 기독청년평화캠프(예정)

①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NG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